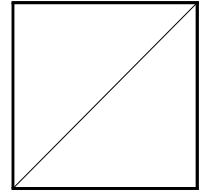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68 호
의 결 연 월 일	2023. 9. 20. (제 16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에 대한  
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소 영
제출 연월일	2023. 9. 20.

## 1. 의결주문

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'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' 사실이 적발되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이라 함)」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## 3. 검사결과 지적사항

### 가.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

- 비엔케이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50백만원 부과

## 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>

다. 관계부서 협의

-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(2023.6.22.) 심의필

## <별지>

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 □ 기관에 대한 조치

- 비엔케이자산운용(주) : 과태료(50백만원)
- 조치사유
  -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55조 제2호, 제85조 제8호, 449조 제1항 제2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7호, 제390조 및 <별표22>,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, 제3항 및 <별표3>

## 2. 조치사유

## 가. 손실보전 금지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

- [illegible]

- 'xx.xx.xx.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에서 동 채권을 발생단계의 부도채권으로 분류하고 채권을 xx.xx억원 상각(xx억원→xx.xx억원)하였으며 펀드 만기를 당초 'xx.xx월말에서 'xx.x월말로 6개월 연장한 상황에서

- 연장된 만기 이후에도 펀드 상환이 재차 지연되어 펀드 투자자들의 민원이 판매사인 □□□□(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의 계열회사) 등을 통해 지속하여 발생하자 동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

○ 'xx.x월경 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의 대표이사가 계열회사인 ♥♥♥♥♥♥♥(주)의 대표이사에게 동 대출채권의 매입을 요청\*하고,

\* 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은 펀드 기초자산인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다른 운용사, 증권사 등과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모두 성사되지 못하자, 비엔케이자산운용(주) 대표이사가 ♥♥♥♥♥♥♥(주) 대표이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채권매각 검토요청

- 이에 ♥♥♥♥♥♥♥(주)이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☒☒☒를 설립한 후, 'xx.x.xx.경 ♥♥♥♥♥♥♥(주)이 동 ☒☒☒를를 경유하여 실질적으로 ◇◇◇◇◇◇◇(주)에게 xx억원을 대출\*\*하고, 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은 ◇◇◇◇◇◇◇(주)에게 동 대출채권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동 대출금액의 대부분(xx.x억원)을 수취하기로 합의하였으며,

\* ♥♥♥♥♥♥♥(주)이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도관체로 설립한 ☒☒☒

\*\* ♥♥♥♥♥♥♥(주)이 ☒☒☒에게 대출(xx.x억원, 금리 x.x%)하고, ☒☒☒가 ◇◇◇◇◇◇◇(주)에게 순차 대출(xx억원)하는 구조

- 'xx.x.xx. 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은 위 합의에 근거하여 ◇◇◇◇◇◇◇◇◇◇(주)에게 장부상 평가금액 xx.x억원\*의 펀드 부실 대출채권을 부도채권 분류에 따른 상각액 xx.xx억원을 반영하지 않은 대출원리금 수준의 금액인 xx.x억원\*\*으로 양도하고\*\*\*,

\* 미상환원금 xx.x억원(최초 대출채권 xx억원 - 기회수액 xx.x억원) - 채권 상각액 xx.xx억원

= xx.x억원 (원금기준)

\*\* 미상환 대출원리금 xx.x억원(미상환원금 xx.x억원 + 미수이자 x.x억원)에 할인율 x.x%를 적용하여 양수도가격을 xx.x억원으로 산정하였으며, 동 대출채권 매각가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채권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음

\*\*\* 비엔케이자산운용(주)와 ♥♥♥♥♥♥♥♥(주)는 상기 거래구조에 대하여 동일한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채권양수도계약 전후로 긴밀히 협의하는 등 본 대출채권 양수도 거래를 주도함

- 'xx.x.xx. 위 양도대금으로 펀드를 청산하여 투자자들에게 상환하여 줌으로써 펀드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을 우회적으로 보전하여 준 사실이 있음

## 관계법규

#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55조(손실보전 등의 금지)**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,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제103조제3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, 그 밖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
2. 투자자가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하여 주는 행위
3.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는 행위
4.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

**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**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- 1.~7. (생략)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### **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 ① ~ ② (생략)**
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2. 신탁계약,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
3.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
4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5. 기관경고
6. 기관주의
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**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6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면직
2. 6개월 이내의 정직
3. 감봉
4. 견책
5. 경고
6. 주의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조치를 함께 하거나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관리·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·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조치를 감면할 수 있다.

**제424조(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) ① ~ ② (생략)**

-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다면 제42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는 이를 퇴임·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449조(과태료) ①**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8의2. (생략)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30. ~ 49. (생략)

② ~ 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(제3항제6호의5에 따른 과태료는 방송통신위원회)가 부과·징수한다.

⑤ ~ ⑥ 삭제 <2009. 2. 3.>

**[별표 1]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·변경 명령의 사유(제43조제2항제4호, 제420조제1항제6호·제3항 및 제422조제1항·제2항 관련)**

55. 제5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92. 제8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**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**

**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~③ 생략**

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~6.(생략)

7. 법 제55조, 제81조,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, 신탁계약,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

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2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9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

□ 금융기관점사및제재에관한규정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<별표2> 과징금 부과기준, <별표3>과태료 부과기준 및 <별표6>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.

[별표3] 과태료 부과 기준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<div> <div>동기</div> <div>위반결과</div> </div>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- 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- 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- 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- 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자산운용검사국
연 락 처	02-2100-2673	02-3145-7630